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Nov. 2019

Vol. 35

11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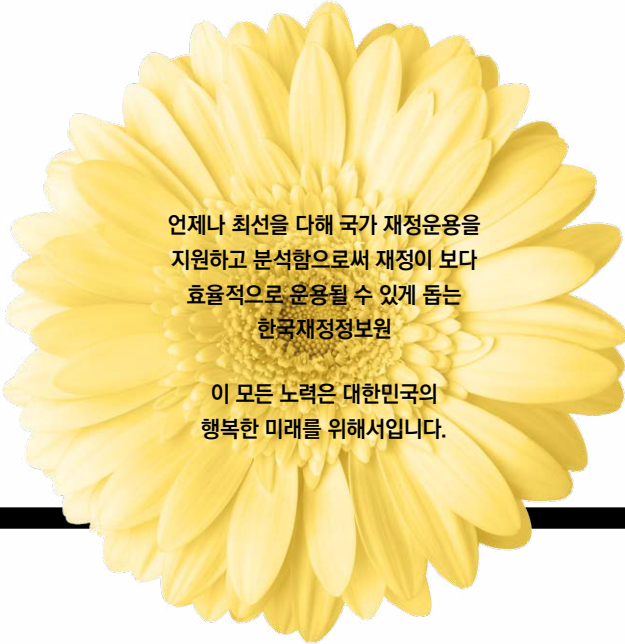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국가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돕는
한국재정정보원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미래 디자이너’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분석기획부 | 02-6908-8583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 ① 적극적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국고채권 발행과 상환
정지윤 dBrain운영본부 과장

20 재정칼럼

- ① 조세지출의 국민경제적 의의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② 조세지출의 효과적 운용
김상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8 톺아보기

조세지출예산

재정
NOW

3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① 최근 재정통계
- ② 분야별 통계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 아프리카돼지열병

44 해외재정동향

2019 한눈에 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재정 현황

재정
STORY

48 이달의 재정 이야기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든든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52 재정 Talk Talk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54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18세기 쌍둥이 금융거품, 세계경제를 뒤흔들다

58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균함 정도는 알아서 만들어라

62 KPFIS의 서재

64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드적극적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sokim@kpfis.or.kr)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최근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01

● 경제 여건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과 2020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0%, 2.2%로 전망하였다. 이는 4월에 발표했던 2.6%, 2.8%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영향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표 1. IMF의 세계경제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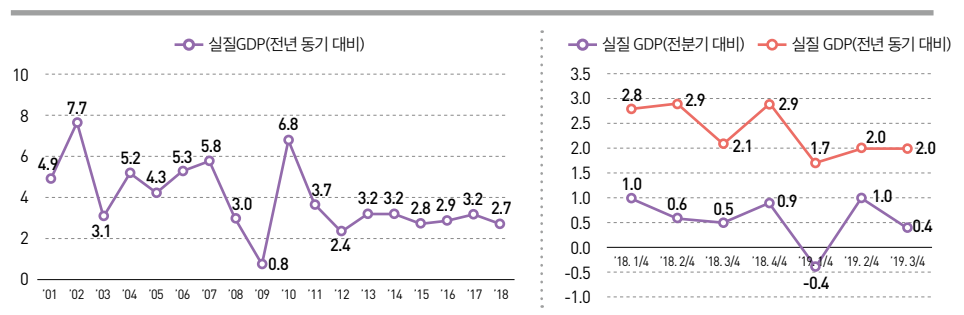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18.10	'19.4	'19.10	'19.4	'19.10
세계	3.7	3.3	3.0	3.6	3.4
미국	2.5	2.3	2.4	1.9	2.1
유로존	1.9	1.3	1.2	1.5	1.4
일본	0.9	1.0	0.9	0.5	0.5
한국	2.6	2.6	2.0	2.8	2.2
중국	6.2	6.3	6.1	6.1	5.8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보도자료(2019. 10. 15.)

경제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최근 대내 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19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민간투자는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진하였다. 고용 지표는 정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2018년도 월평균 9.7만 명에서 2019년도 월평균 22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 및 중장년층의 고용 부진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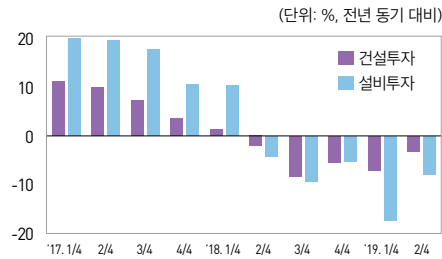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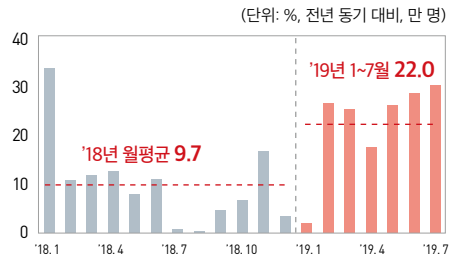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 취업자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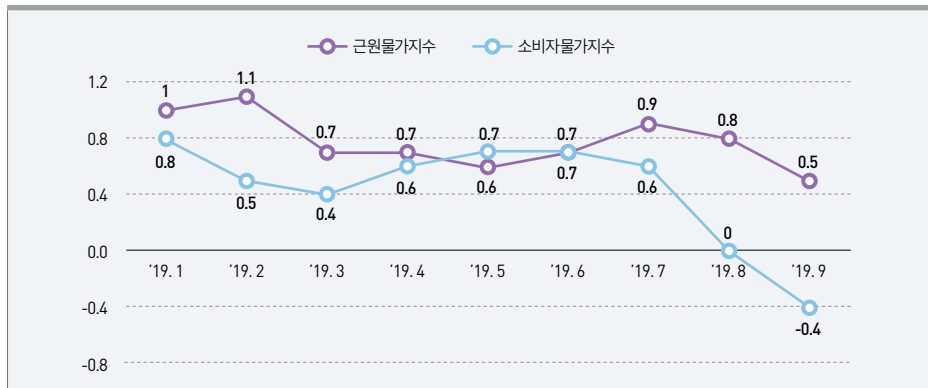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특히,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가 낮아진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가 디플레이션¹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물가 하락의 원인은 일시적으로 농산물과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폭이 전월에 비해 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근원물가지수²로 보면 0.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디플레이션의 시작은 아니라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나³, 수요 위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⁴.

그림 4.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주: 근원물가지수는 단기적인 영향을 제외한 물가지수로, 여기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 기준을 이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¹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등 종합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² 근원물가지수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로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같이 두 가지 근원물가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³ KDI,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도자료(2019. 10. 29.)

⁴ 폴 크루그먼,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성과공유” 컨퍼런스(2019. 9. 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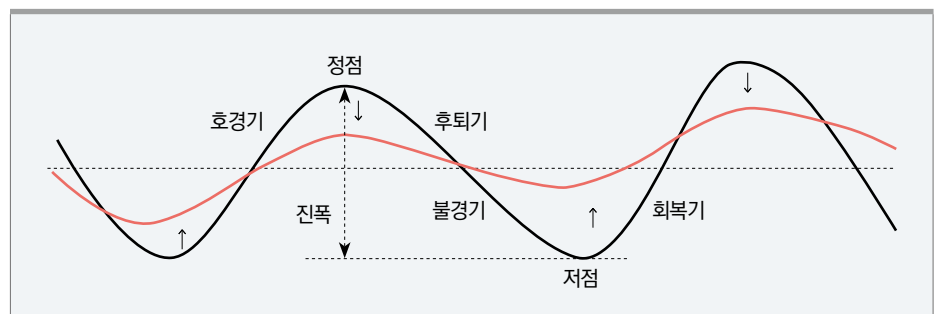
● 경기변동과 재정정책

세계적 석학인 폴 크루그먼은 한국이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재정투입을 통한 단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고⁵, 그의 저서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통화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정부는 지출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⁶. 또한, IMF는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통화정책의 완화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경제 안정화 및 성장률 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정부는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해 정부의 세입을 조정하는 조세정책, 세출의 크기를 조정하는 지출정책과 자산 및 부채 관리하는 정책 등의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정책 중 하나인 통화정책⁷과 같이 사용하게 된다.

재정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호황과 불황의 경기변동 진폭을 축소시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내 경제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경우 고용 및 소득의 변동성도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침체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고용 및 소득이 감소하게 되며 소비침체는 가속화된다. 따라서 경기침체 시 소비와 기업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도록 유도해 경기 진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5.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



⁵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관련 자료(2019. 9. 9.)

⁶ 폴 크루그먼(2012),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인용, 박세연 옮김, 엘도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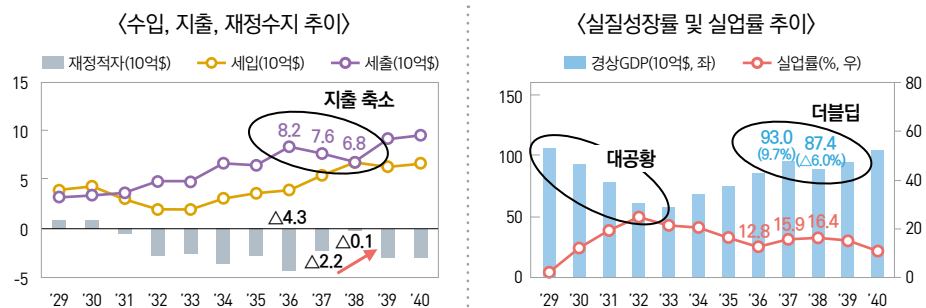
⁷ 통화정책은 이자율 또는 통화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통화공급량, 인플레이션율, 또는 총수요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즉,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효수요를 늘려 기업의 생산량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재정정책은 승수효과⁸의 크기만큼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⁹과 1990년대 이후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기침체¹⁰가 대표적이다. 특히, 고령화 등 인구 특성과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장기 경제침체로 조세수입이 크게 감소한데 반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 SOC 등 공공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출 확대, 지방이전재원의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의 부담이 가중되었다¹¹. 이로 인하여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급증하게 되었다.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으나,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감세정책¹²과 지출 축소로 장기불황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추진의 시점과 기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그림 6. 1930년대 미국 사례



자료: 한국재정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기초발표 자료

⁸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 주체 간 연쇄반응으로 일어나는 총수요의 증가 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한다.

⁹ 대공황은 1929년 10월 미국 주가폭락으로 촉발되어 진행된 초기 3년간의 디플레이션과 이후 8년간의 장기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1933년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무리한 시장개입과 35년 이후 도입된 노동법·사회보장법·세입법 도입 등 반기업 정책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포스코경영연구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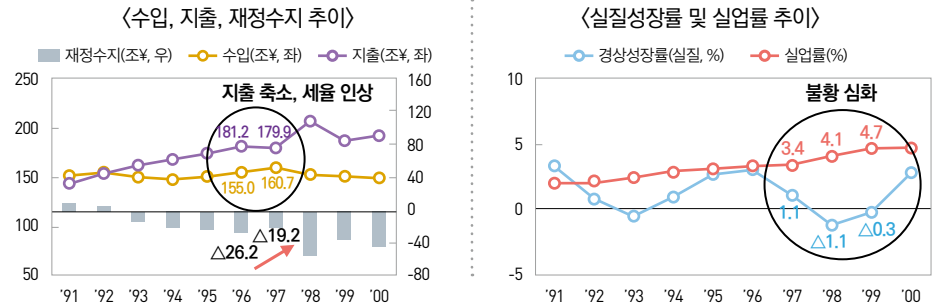
¹⁰ 일본은 1990년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붕괴, 엔화 강세, 글로벌 경쟁심화 등 경제 상황이 악화 되면서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후 1991년 7월부터 금리 인하, 1999년 3월 금리를 0.04%로 낮추어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으나 금리 인하 속도와 정도가 너무 느려 금융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¹¹ 김성태, 「한국 거시경제정책의 현황, 과제 그리고 미래」, 발표 자료(2015. 8. 27.)

¹² 일본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관련 공제 확대 및 세율인하를 1994년, 1998년, 1999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림 7. 1990년대 일본 사례



자료: 한국재정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기조발표 자료

03

● 적극적 재정정책과 중장기재정운용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물가 상황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R&D·산업·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재정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¹³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수입은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의 영향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482조 원이고, 총지출 규모는 513.5조 원으로 2019년 대비 9.3% 증가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평균 6.5%씩 증가하는 재정지출 방향을 발표하였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연도별 증가율이 하향되도록 계획하였으나, 2018~2022년 계획보다 증가된 지출 규모로¹⁴ 재정의 적극적 운용 의지를 드러냈다.

확장적 재정지출의 재원 배분 방향은 ① 사회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②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으로 추진된다.

¹³ 중장기에 대한 재정 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재정운용 계획으로,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하여 경제 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여 발표하고 있다.

¹⁴ 2018년도에 발표했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19년 470.5조 원, '20년 504.6조 원, '21년 535.9조 원, '22년 567.6조 원의 재정지출을 계획했다.

표 2. 재정 수입과 지출,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 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추경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476.1	476.4	482.0	505.6	529.2	554.5
총지출	469.6	475.4	513.5	546.8	575.3	604.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6.5 (0.3)	1.0 (0.0)	-31.5 (-1.6)	-41.3 (-2.0)	-46.1 (-2.1)	-49.6 (-2.2)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7.6 (-1.9)	-42.3 (-2.2)	-72.1 (-3.6)	-81.8 (-3.9)	-85.6 (-3.9)	-90.2 (-3.9)
국가채무 (GDP 대비)	740.8 (37.1)	731.5 (37.2)	805.5 (39.8)	887.6 (42.1)	970.6 (44.2)	1,061.3 (46.4)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예산안」,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3. 2019~2023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연평균
총지출	469.6 (9.5)	513.5 (9.3)	546.8 (6.5)	575.3 (5.2)	604.0 (5.0)	(6.5)
보건·복지·고용	161.0 (11.3)	181.6 (12.8)	198.4 (9.3)	213.2 (7.4)	229.1 (7.5)	(9.2)
교육	70.6 (10.1)	72.5 (2.6)	76.0 (4.9)	79.1 (4.1)	82.0 (3.5)	(3.8)
문화·체육·관광	7.2 (12.2)	8.0 (9.9)	8.3 (4.6)	8.6 (3.8)	9.0 (3.6)	(5.4)
환경	7.4 (7.2)	8.8 (19.3)	9.6 (8.5)	10.1 (5.8)	10.6 (4.2)	(9.3)
R&D	20.5 (4.4)	24.1 (17.3)	26.7 (10.7)	28.7 (7.7)	30.9 (7.6)	(1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15.4)	23.9 (27.5)	26.4 (10.3)	28.0 (6.1)	29.9 (6.9)	(12.4)
SOC	19.8 (4.0)	22.3 (12.9)	23.4 (4.9)	23.7 (1.4)	23.7 (-0.3)	(4.6)
농림·수산·식품	20.0 (1.5)	21.0 (4.7)	21.5 (2.3)	21.9 (1.9)	22.2 (1.6)	(2.6)
국방	46.7 (8.2)	50.2 (7.4)	53.4 (6.5)	56.4 (5.7)	59.5 (5.4)	(6.2)
외교·통일	5.1 (7.2)	5.5 (9.2)	5.9 (6.2)	6.3 (6.5)	6.6 (5.6)	(6.9)
공공질서·안전	20.1 (5.6)	20.9 (4.0)	21.8 (4.2)	22.7 (3.9)	23.5 (3.7)	(4.0)
일반·지방행정	76.6 (11.0)	80.5 (5.1)	82.4 (2.4)	84.3 (2.3)	86.1 (2.2)	(3.0)

주: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2020년 예산안에는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보 제도개선,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보강 등으로 12.8%가 증가^{15, 16}하고, 이중 일자리와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관련 예산이 21.3%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이전지출을 늘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총수요를 늘리는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적 재정지출로 당분간 적자 재정수지의 폭이 커지고, 국가채무는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로 증가하고, 2023년까지 GDP 대비 46%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일본(214.6%), 프랑스(110.0%), 영국(108.6%), 미국(99.2%)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¹⁷이며, 국제기구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2000~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OECD 평균 7.5%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¹⁸.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단편적으로 저성장 기조는 재정 수입 여건을 악화시키는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의무지출 비중 확대를 예상¹⁹할 수 있다.

이런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초하에서,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의 혁신성·포용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과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 개선 노력,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¹⁵ 보건복지부는 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을 추가하고, 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③ 주가·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2019년 253,750원에서 2020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¹⁶ 건강보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중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으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안 금액이 2019년 예산액 대비 382억 원(12.7%) 증액되었다.

¹⁷ 국가별 국가채무 기준은 2018년 국가채무(D1) 기준으로, GDP 대비 중앙·지방정부 채무 비율이다.

¹⁸ KDI(2018),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¹⁹ 우리나라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2019~2023년 기간 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다.

02

KPFIS-인사이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국고채권 발행과 상환

정지윤 dBrain운영본부 과장(jy8088@kpfis.or.kr)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1950년 최초로 국채발행이 이루어진 이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채 발행물량이 증가하고 국채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기반이 구축되면서 국채시장은 채권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채는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 4종류로 발행되고 있다. 이번 호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국내 채권시장에서 지표채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고채권이 dBrain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01

개요

국고채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고 있으며, 1998년 9월 ‘국채관리기금채권’을 현재의 ‘국고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채 중 국고채권은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행된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채권의 종류로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만기의 고정금리채권과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따라 변동하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가 있다.

국고채권의 발행과 상환 등 국고채권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 국채과와 국고과, 그리고 「국채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으며 dBrain과 한국은행금융결제망시스템(BOK-Wire+)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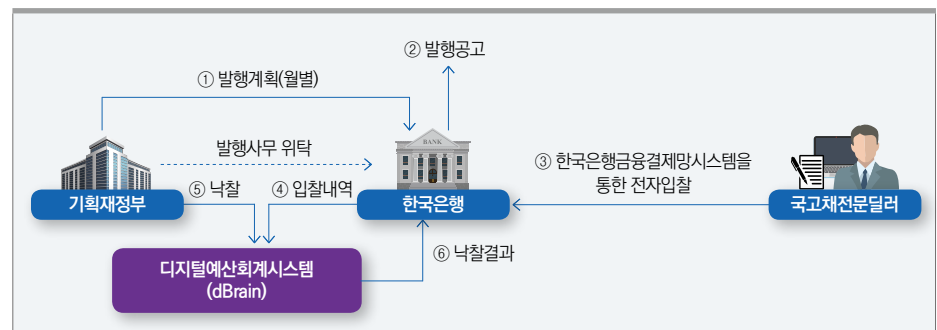
02

국고채권 입찰과 발행

1) 입찰·낙찰

국고채권은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정례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응찰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발행에 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하여 낙찰이 이루어진다.

그림 1. 국고채권 입찰·낙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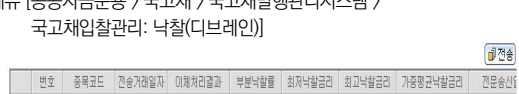
- ① 발행계획(월별):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발행한도가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발행계획안 작성
- ② 발행공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입찰 3일 전 발행공고 등록

- ③ 전자입찰: 국고채전문딜러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 ④ 입찰내역: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시스템을 통해 입찰내역이 dBrain으로 전송
- ⑤ 낙찰: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dBrain에 접속하여 낙찰 확정
- ⑥ 낙찰결과: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dBrain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시스템으로 낙찰정보 전송

● dBrain을 통한 입찰·낙찰 관리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dBrain에 접속하여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시스템을 통해 입찰된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낙찰을 확정한다. 이후 낙찰된 결과는 dBrain을 통해 한국은행금융결제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표 1. dBrain 국고채권 입찰·낙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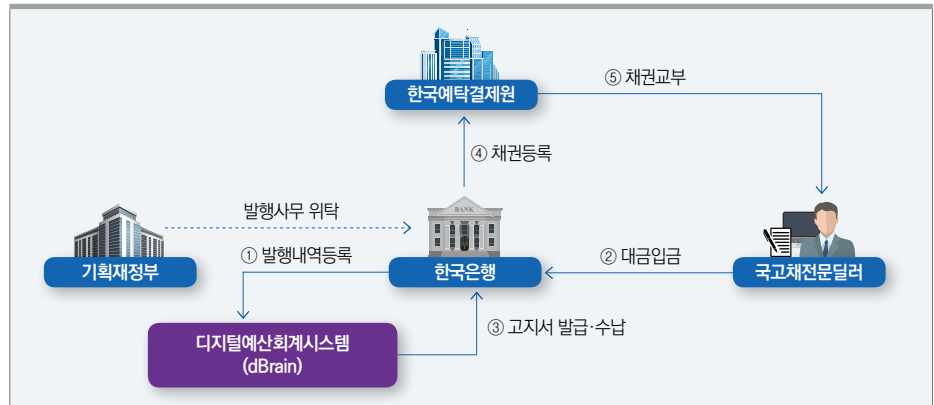
업무	화면	내용
① 입찰 내역 확인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 > 국고채입찰관리: 응찰(한은)] 자금원세: 06-053049 기획재정부/금융자금관리기금/통자기계통/기획재정부 국고채 국고채 자금원세 입찰일자: 2019-10-29 국고채종목번호: [선택] 낙찰금액: [입력] 억 응찰(한은) 낙찰(디브레인) 낙찰결과(한은) 응찰번호 응찰금액 응찰가량 응찰가량(%) (대외: 06.30) 국고채번호 국고채명 입찰번호 응찰금액 응찰가량 응찰가량(%) 응찰가량(%) 응찰가량(%)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입찰 내역을 확인한다.
② 낙찰 확정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 > 국고채입찰관리: 응찰(한은)] 자금원세: 06-053049 기획재정부/금융자금관리기금/통자기계통/기획재정부 국고채 국고채 자금원세 입찰일자: 2019-10-29 국고채종목번호: [선택] 낙찰금액: [입력] 억 응찰(한은) 낙찰(디브레인) 낙찰결과(한은) 응찰번호 응찰금액 응찰가량 응찰가량(%) (대외: 06.30) 국고채번호 국고채명 입찰번호 응찰금액 응찰가량 응찰가량(%) 응찰가량(%) 응찰가량(%)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입찰내역을 확인한 후 최종 낙찰을 확정한다.
③ 낙찰 결과 전송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 > 국고채입찰관리: 낙찰(디브레인)] 번호 종목코드 전송가량입력 이계처리결과 부분낙찰률 최저낙찰금 최고낙찰금 가중평균낙찰금 전송승인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낙찰결과를 한국은행으로 전송한다.
④ 낙찰 결과 확인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 > 국고채입찰관리: 낙찰결과(한은)] 자금원세: 06-053049 기획재정부/금융자금관리기금/통자기계통/기획재정부 국고채 국고채 자금원세 입찰일자: 2019-10-29 국고채종목번호: [선택] 낙찰금액: [입력] 억 응찰(한은) 낙찰(디브레인) 낙찰결과(한은) 응찰번호 응찰금액 응찰가량 응찰가량(%) (대외: 06.30) 국고채번호 국고채명 입찰번호 응찰금액 응찰가량 응찰가량(%) 응찰가량(%) 응찰가량(%)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한국은행으로 전송된 낙찰결과를 최종 확인한다.

2) 발행

국고채권 발행은 한국은행이 최종 낙찰된 금액을 국고계좌로 납입한 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채권등록부에 일괄등록하고 예탁계좌부를 통해 발행이 이루어진다.



그림 2. 국고채권 발행 절차



- ① 발행내역등록: 한국은행 담당자가 dBrain을 통해 낙찰결과와 확인 후 발행내역 등록
- ② 대금입금: 국고채전문딜러가 낙찰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은행으로 대금입금
- ③ 고지서발급·수납: 수입징수관이 dBrain을 통해 고지서를 발급하고 한국은행 담당자가 국고계좌로 수납
- ④ 채권등록: 한국예탁결제원 담당자가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권리내역 등록
- ⑤ 채권교부: 한국예탁결제원 담당자가 예탁계좌부에 기재하고 국고채전문딜러에게 채권 교부

◎ dBrain을 통한 발행 관리

한국은행 담당자는 dBrain에 접속하여 낙찰 결과를 확인한 후 발행내역을 등록하고 징수 요청서를 작성한다. 수입징수관은 요청서를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행하며 한국은행 담당자는 해당 고지서를 국고채전문딜러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수납한다. 수납된 금액은 최종 국고계좌로 입금되며 국고채관리대장에서 종목별 발행내역을 확인한다.

표 2. dBrain 국고채권 발행관리 절차

업무	화면	내용
① 발행등록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 국고채발행정보 국채구분: 100000 국고채권 ☐ 전액조건부채권 ☒ 일반채권 국채관리구분: ☐ 채권 ☒ 이차채권 국채종류: ☐ 일반채권 ☐ 전액조건부채권 발행일: 연: 월: 일: 발행일: 연: 월: 일: 발행금액: 이자율: % 대금납입일:	한국은행 담당자가 낙찰정보를 기준으로 발행내역을 등록한다.
② 징수요청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 > 징수요청] 징수요청서(국고채발행) 징수요청정보 회계연도: 2019 부서: 00-000000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통계청/기획재정부 국고채 관리과 자금관리 수입징수관: 00-000000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통계청/기획재정부 국고채 관리과 자금관리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징수기간: 징수금액: 결제내역(의뢰):	한국은행 담당자가 징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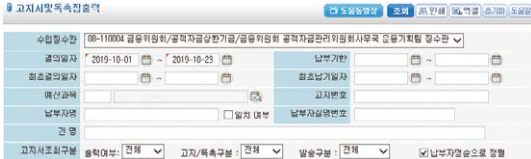
업무	화면	내용
③ 고지서 발급	☞ 메뉴 [수입] > 고지관리] > 고지서및ထုထွက်စာရင်း] 	담당 수입징수관은 정수내역을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수납정산	☞ 메뉴 [수입] > 수납관리] > 수납정산(고지기준)] 	담당 수입징수관은 고지서의 수납여부를 확인한 후 수납정산을 한다.
⑤ 대장조회	☞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현황] > 국고채관리대상조회] 	한국은행 담당자는 종목별 발행내역을 확인한다.

표 3. 연도별 국고채권 발행 현황

(단위: 조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고 채권	발행	81.3	79.7	88.4	97.5	109.3	101.1	100.8	97.4
	상환	51.3	56.8	50.6	59.9	62.4	69.3	71.0	77.1
	잔액	340.1	362.9	400.7	438.3	485.1	516.9	546.7	567.0

03

국고채권 상환

국고채권 상황은 국고채권이 소멸되고, 국고채권 원리금이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상황은 만기상황, 조기상황, 교환이 있다. 만기상황은 국고채권의 발행 시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고, 조기상황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권을 보유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며, 교환은 국고채권을 신규로 발행하여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권과 교환하는 제도이다.

표 4. 국고채권 조기상환과 교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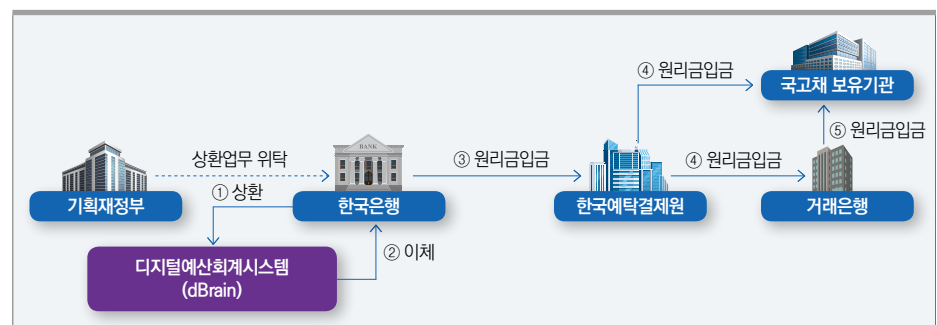
	조기상환(Buy Back)	교환(Conversion Offer)
도입일	- 2000년 12월	- 2009년 5월
목적	-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신규채권으로 전환하여 유동성을 제고 - 단기를 매입, 장기를 발행 등을 통한 국고채권 만기 분산	-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신규채권으로 전환하여 유동성을 제고
절차	- 신규 국고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 동 자금을 활용한 경과물 매입의 2단계 절차	- 경과물과 신규 국고채권을 직접 교환하는 1단계 절차
자금흐름	- 정부와 거래상대방 간 채권매매대금을 각각 현금으로 결제	- 신규물과 경과물을 현물로 교환하고 차액만 현금 정산
기대효과	- 국고채권의 만기를 분산시켜 재정 부담이 일시에 가중되는 차환위험을 감소	- 국고채권 만기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 발행된 국고채권의 발행 물량을 조기에 확대시켜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

표 5. 연도별 국고채권 조기상환 및 교환 규모

(단위: 조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기상환	22.3	12.0	5.6	5.2	12.1	11.3	17.6	27.0
교환	4.8	2.0	2.9	3.1	4.6	4.2	1.7	2.2

그림 3. 국고채권 상환 절차



- ① 상환: 한국은행 담당자가 dBrain을 통해 상환요청서 작성 후 지출요청
- ② 이체: 지출권이 dBrain의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한국은행 원리금 상환계정으로 이체
- ③ 원리금입금: 한국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의 당좌예금계좌로 입금
- ④ 원리금입금: 한국예탁결제원이 국고채 보유기관 또는 거래은행으로 입금
- ⑤ 원리금입금: 거래은행이 국고채권 보유기관으로 입금

● dBrain을 통한 상환 관리

한국은행 담당자는 dBrain에 접속하여 미상환 대상을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산출한 후 지출요청서를 작성한다. 지출권이 요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원리금을 이체하면 국고계좌에서 한국은행 원리금 상환계정으로 입금된다. 종목별 상환내역은 국고채 상환관리대장조회에서 확인하고, 최종 발행 잔액은 잔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dBrain 국고채권 상환관리 절차

업무	화면	내용
① 상한내역 산출	☞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원리금상환] 지출요청]	한국은행 담당자는 미상환 대상을 기준으로 상한내역을 산출한다.
② 지출요청	☞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원리금상환] 지출요청]	한국은행 담당자는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지출관에게 지출을 요청한다.
③ 계좌이체	☞ 메뉴 [지출] > 지출결의] 계좌이체요구 > 계좌이체요구]	담당 지출관이 전자자금 이체를 통해 원리금을 이체하면 최종 국고계좌에서 한국은행 원리금 상환계정으로 이체된다.
④ 대장조회	☞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현황] 국고채상환관리대장조회]	한국은행 담당자는 종목별 상한내역을 확인한다.
⑤ 잔액조회	☞ 메뉴 [공공자금운용] > 국고채 > 국고채발행현황] 잔액조회]	한국은행 담당자는 종목별 발행금액, 상환금액, 발행잔액을 확인한다.

표 7. 연도별 국고채권 발행 잔액 현황

(단위: 조 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년 만기 (비중)	50.8 (14.9)	47.7 (13.1)	50.5 (12.6)	58.5 (13.3)	64.1 (13.2)	62.1 (12.0)	51.1 (9.3)	47.2 (8.3)
5년 만기 (비중)	97.4 (28.6)	95.9 (26.4)	99.4 (24.8)	103.0 (23.5)	110.7 (22.8)	108.0 (20.9)	109.5 (20.0)	104.2 (18.4)
10년 만기 (비중)	140.9 (41.4)	152.4 (42.0)	165.7 (41.4)	170.1 (38.8)	179.9 (37.1)	189.0 (36.6)	198.5 (36.3)	195.1 (34.4)
물가 (비중)	4.1 (1.2)	7.6 (2.1)	8.1 (2.0)	8.4 (1.9)	9.1 (1.9)	11.0 (2.1)	10.5 (1.9)	9.4 (1.7)
20년 만기 (비중)	46.9 (13.8)	57.7 (15.9)	66.4 (16.6)	77.2 (17.6)	88.1 (18.2)	98.2 (19.0)	108.3 (19.8)	117.5 (20.7)
30년 만기 (비중)	-	1.6 (0.4)	10.7 (2.7)	21.0 (4.8)	12.1 (11.1)	47.5 (9.2)	67.6 (12.4)	90.2 (15.9)
50년 만기 (비중)	-	-	-	-	-	1.1 (0.2)	1.3 (0.2)	3.4 (0.6)
계	340.1	362.9	400.7	438.3	485.1	516.9	546.7	5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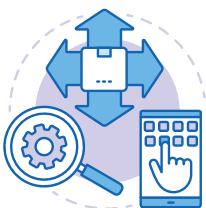
04

맺음말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dBrain을 이용한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파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차세대 dBrain에서는 국고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표 8. 2019년 dBrain 국고채권 주요 개선사항

일정	개선내용
9월	만기가 도래하는 물가연동국고채권의 유통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국고채권 조기상환·교환 시 마이너스 금리로도 응찰과 낙찰이 실행되도록 개선
12월	국고채권 조기상환·교환 시 매입대상 종목 선정 기준을 종목관리코드* 13자리에서 9자리로 변경하여 응찰과 낙찰이 실행되도록 개선 * 표면금리(5) + 만기연월(4) + 발행회차(4) → 표면금리(5) + 만기연월(4)



조세지출의 국민경제적 의의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stkim@cju.ac.kr)



01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당황스럽게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세지출이 정반대 개념의 단어를 합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세는 자원이 민간부문 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인데 지출은 자원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명칭 때문에 조세지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조세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지출의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니까 조세는 조세지출의 껍데기고 정부지출은 내용이다. 조세지출이라는 용어의 이중성과 복잡성 때문에 조세지출의 국민경제적 의의는 복잡하다. 따라서 조세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경제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우리나라 조세지출규모는 47.4조 원으로 전망되어 국세수입총액(294조 8천억 원)과 국세감면액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합계의 13.9%가 되어 정부가 만든 재정운용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감면한도(13.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¹.

조세지출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양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지출을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에 산서」는 조세지출을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 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을 광의로 해석하여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².

조세지출은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구분된다. 직접감면은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세 부담을 경감하는 직접적인 감면인데, 직접감면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한편 간접감면은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감면을 의미한다.

향후 조세지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지출을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로 재정정책은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재원의 이전행위는 정부가 직접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인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과 조세부담을 경감해주는 행위인 조세지출로 구분된다.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3대 기능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소득분배의 공평성 증대 및 경제의 안정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세유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지출은 수혜집단이 명시적인 데 반해 조세지출의 수혜집단은 확인이 쉽지 않아 묵시적이다. 이는 조세지출의 사회후생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에 따라 관련 재화의 세후가격을 감소시키며, 상대가격체계를 변화시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예로서 기존 개별소비세에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면 개별소비세에 의한 사회후생손실 규모가 감소되므로 사회후생은 조세감면 후에 증가한다. 여기서 개별소비세 감면의 비용은 조세감면에 의한 세수손실분이 되고, 개별소비세 감면의 편익은 감면에 의한 사회후생 증가분이 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감면의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된다.

¹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² 개별 세법은 특정성, 전위가능성, 폐지가능성 등 조세지출의 특성과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연혁·필요적 경비여부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정부예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그 많은 조세감면이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타당한 것인가?”이다. 현재 많은 조세감면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소득이전의 성격을 갖는 것이 많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세지출을 결정하여야 될 것이다.

조세지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를 검토하여 조세지출을 결정하여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지출과 조세지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회후생분석을 수행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될 것이다. 사회후생분석에 따라 대안으로 선택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소위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수행하여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ratio)이 1보다 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대안은 재정정책의 기회집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후생분석을 계량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후생분석을 수행하여야 되는데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과 같은 모의실험 방법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특정조세지출에 대한 수요반응을 엄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정조세지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정량적인 척도와 정성적인 척도를 어떻게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가이다. 정량적인 척도는 조세지출이 어느 정도 사회후생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한편 정성적인 척도는 특정조세지출의 정책적 타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인데 정부 역할의 적절성과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역할의 적절성은 정부개입의 적절성과 정책수단의 적절성으로 구분되며,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은 정책목표의 적절성, 정책대상의 적절성, 제도운영의 적절성과 타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조세지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개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향후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보다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향후 우리나라 재정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비추어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재정공급의 역량이 감축될 것이 전망되므로 보다 엄격한 조세지출제도의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로 결정되어 조세감면액이 조세수입의 증가율을 초과하는 추세에 들어서는 경우 견잠을 수 없이 조세지출이 증가할 것이므로 세수결손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국세감면율의 일정 %로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규제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조세지출에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세지출의 효과적 운용

김상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sanghkim@snu.ac.kr)



02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이와 같이 정의되는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응된다 하겠다. 조세지출은 납세자의 의무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행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곤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독일의 경우 1954년부터 조세특례를 보조금제도로 간주하였으나 조세지출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1967년 재무부 차관보(Stanley S. Surrey)가 세금제도 중에서도 재정지출 성격을 띠는 조세특례제도를 ‘조세지출’이라는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점차 이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조세지출’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996년 조세지출제도의 특성으로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기타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특정성의 경우,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가능성이다. 폐지가능성은 특정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기타 기준은 조세지출이 규모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기준인 기준조세제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야 하며, 조세지출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항목이 동일 조세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의 전체 규모를 국세감면액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발표해오고 있다. 자료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조세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지원 및 재분배 등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지출 증가율은 2014~2017년 평균 4.9%에서 2017~2019년 9.3%로 상승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세지출의 전체규모는 47.7조 원에 이르며, 사회복지 15.9조 원(33.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2조 원(25.8%), 보건 5.9조 원(12.5%), 농림수산물 5.7조 원(12.0%) 등 4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특히, 2012~2019년 중 사회복지(7.3조 원 → 15.9조 원)와 보건(3.3조 원 → 5.9조 원) 분야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이 확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최근 소폭으로 상승하였다(11.8조 원 → 12.2조 원).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제도는 재정학자들 사이에 그리 좋은 인상을 남기지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조세지출제도가 재정부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직결되어 있다. 국가재정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큰 두 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조세지출제도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출과 관련된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조세지출 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한 연구결과 따르면,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8년 국제통계연보'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2017년 조세지출 실적 54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14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4개 항목은 3,901억 원이 조세지출 실적에 더 반영되었고, 농어업용 석유류 교통세 감면 등 10개 항목은 1,899억 원이 덜 반영되었다. 14개 항목의 총 조세지출은 4조 1,465억 원인데 과소 또는 과다 반영된 금액은 5,800억 원(14%)으로 나타나 통계의 부정확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부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별로 239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량만 발표할 뿐,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조세지출액(2017년 1.7조 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귀착효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한다. 즉, 개인사업자분 조세지출액 1.7조 원은 전액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증가해도 중소기업 증가분으로 간주되는 등 통계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세지출과 관련된 통계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단적인 예들이다.



둘째, 조세지출제도의 효과평가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조세지출 폐지 및 축소안에 따른 정비효과는 401억 원으로 과거 조세지출예산 서상 정부가 집계한 정비효과의 1/10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안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액을 각각 연간 3.5조 원 및 0.3조 원 규모로 전망하였으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폐지로 분류된 10건도 무실적 항목 3건 등 10억 미만 실적 항목이 7건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감면의 경우,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체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운영규모는 2016년 기준 12.9조 원).

이와 같은 정보의 불명확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제도에 대한 평가의 미흡은 약한 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겠다. 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가 실시된 15건의 경우 모두 제도의 축소 또는 개선 등이 권고되었으나, 2건을 제외하고 모두 단순 연장되거나(7건) 오히려 확대(6건) 연장되었다. 또한, 적극적 관리대상인 224개 중 55개(24.7%) 항목이 일몰 없이 운용되고 있는데, 감면액 규모는 8.4조 원에 이른다.

제도에 대한 통제의 미흡은 오용이나 남용으로 이어지는 첩경이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희생물이 되기 쉬우며, 조세지출제도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예산과정이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지출이나 조세 감면 공약은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과 이들과 맞물린 이해관계자들의 작품이다. 정해진 예산을 두고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는 일종의 ‘경쟁’이 존재하며, 그런 만큼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조세지출에는 이러한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선심성 공약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조세지출제도가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통제의 강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조세지출예산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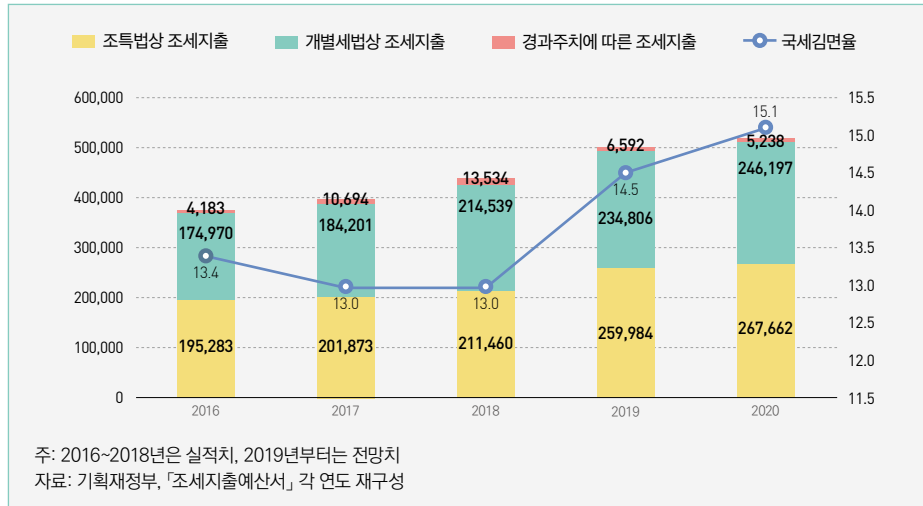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이연에 따른 재정지원, 즉 세입감면에 따른 국가세입의 감소를 지출로 인식하여 예산서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조세지출은 51.9조 원으로 전망되고 국세감면율은 15.1%로 증가 전망

○ 지방재정 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소비세 비율 증가로 부가가치세 배정 확대('19년 15%, '20년 21%)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국세감면율 증가

그림 1. 국세감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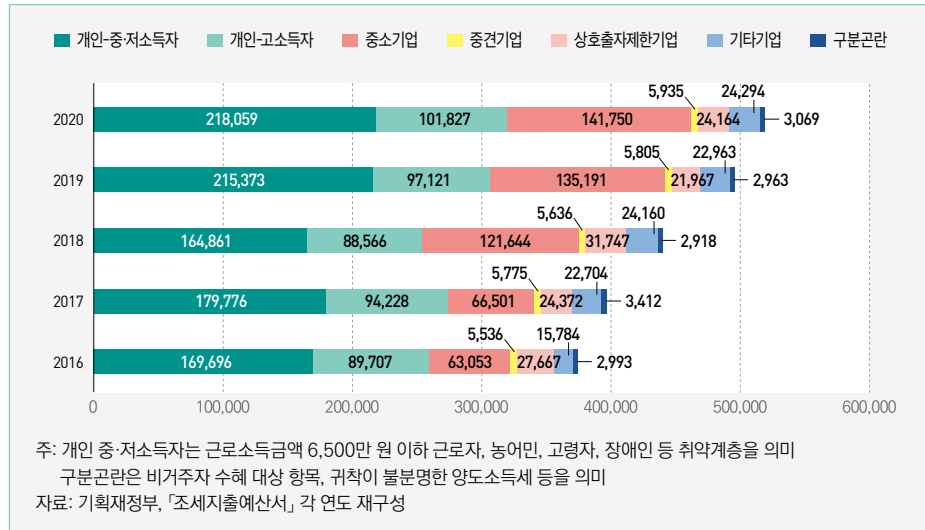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 국세감면의 수혜자별 혜택을 살펴보면,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20년을 기준으로 약 21.8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이 약 14.2조 원을 차지

그림 2.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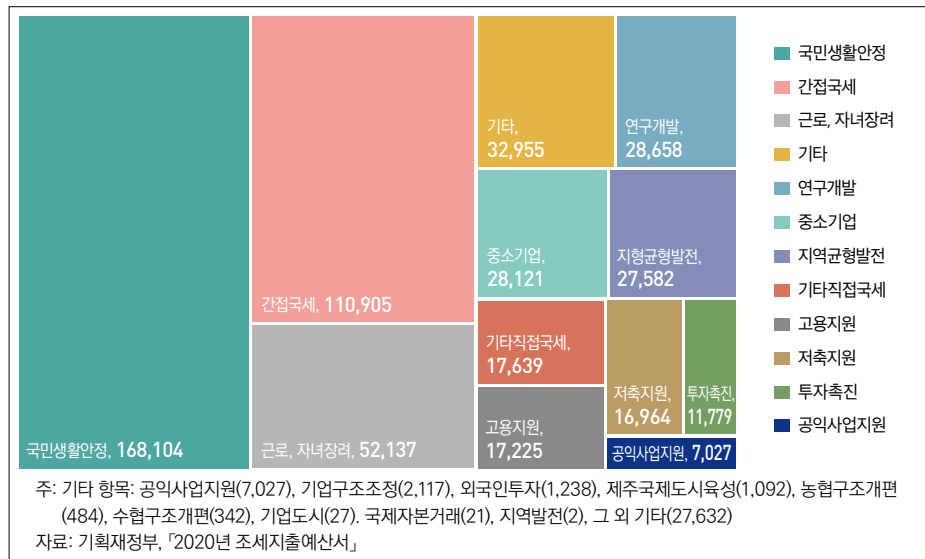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분야별로는 '20년 예산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지출이 약 16.8조 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간접국세 11.1조 원, 근로·자녀장려 5.2조 원, 연구개발 2.9조 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0년의 주요 조세지출 항목은 근로장려금 지급이 4.5조 원, 면세 농산물 등의 제매입세액공제 3.1조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조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1조 원, 자녀세액공제 1.3조 원 등

(단위: 억 원)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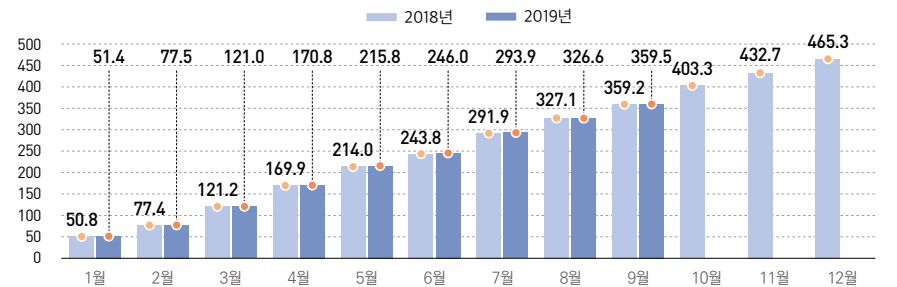
1. 최근 재정통계

총수입

2019년 9월 중 총수입은 32.9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5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 원 증가하였으며 진도율¹은 전년 대비 1.7%p 하락한 75.5%이다. 이는 국세수입 228.1조 원(전년 대비 5.6조 원 감소), 세외수입 18.7조 원(전년 대비 0.7조 원 감소), 기금수입 112.7조 원(전년 대비 6.6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

총수입
359.5조 원

총수입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2019년 9월 중 국세수입은 18.6조 원(법인세 9.4조 원, 소득세 2.5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228.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조 원 감소하였다. 세수 진도율²은 77.4%로 2018년 결산 기준 진도율(79.6%) 대비 2.2%p 하락하였다. 이는 8~9월 중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전년 대비 약 3.2조 원),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등에 기인한다.

¹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76.4조 원이다.

²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국세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국세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은 268.1조 원이며 2019년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은 294.8조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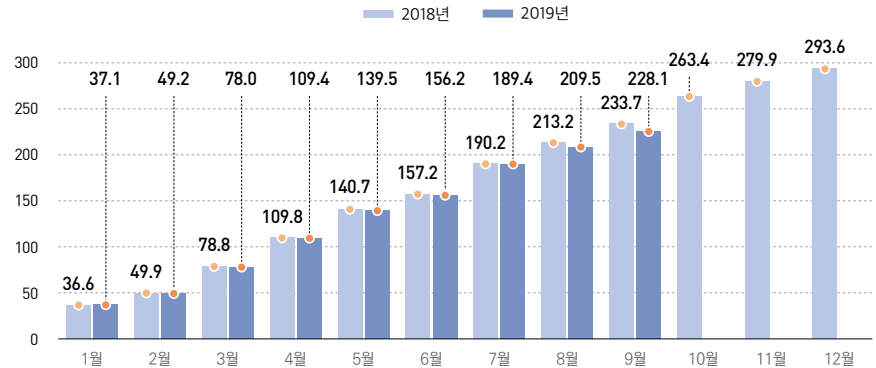


국세수입

228.1 조 원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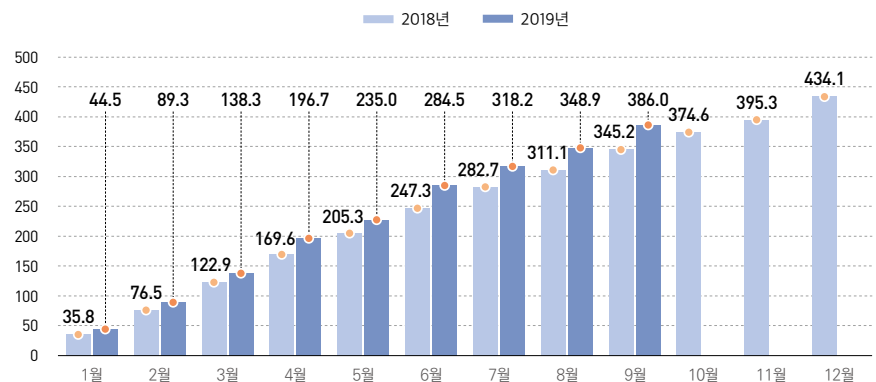
2019년 9월 중 총지출은 37.1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386.0조 원이며 진도율은 81.2%로 전년 동기 대비 40.9조 원 증가(진도율 1.4%p 상승)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268.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4조 원 증가하였고, 기금은 10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7.1조 원 증가하였다.

총지출

386.0 조 원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3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이며 2019년 총지출 예산은 475.4조 원이다.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⁴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9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213.6조 원으로, 연간 계획(252.6조 원) 대비 84.6%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176.7조 원(연간 계획 대비 84.6%), 40개 기금에서는 36.9조 원(연간 계획 대비 84.4%)을 집행하였다.

9월 말까지의 주요 분야별 집행률은 과학기술(92.8%), 통신(90.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90.3%), 일반·지방행정(87.3%) 분야 순으로 높으며, 국방(66.6%), 공공질서 및 안전(76.5%), 국토 및 지역개발(80.5%)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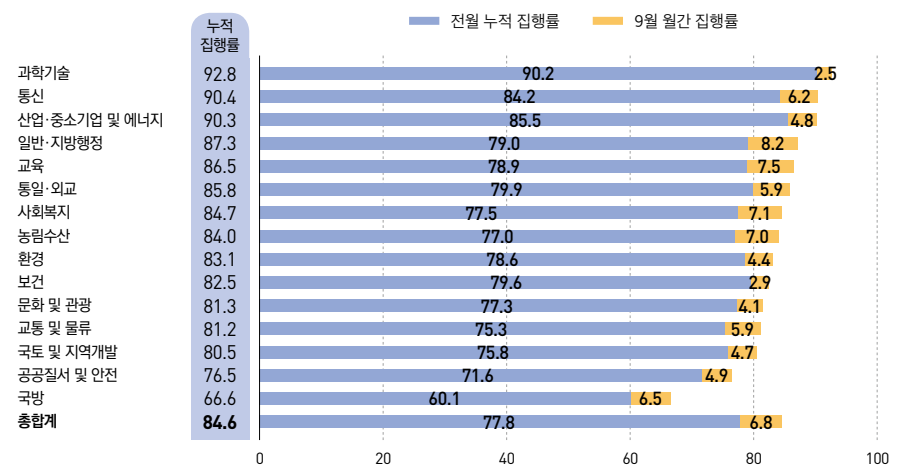
9월 월간 집행률은 6.8%이며,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8.2%), 교육(7.5%), 사회복지(7.1%), 농림수산(7.0%)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누적 집행률
84.6%

월간 집행률
6.8%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수지

2019년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6.5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30.5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0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0.6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39.7조 원 악화되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및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기인한다.

⁴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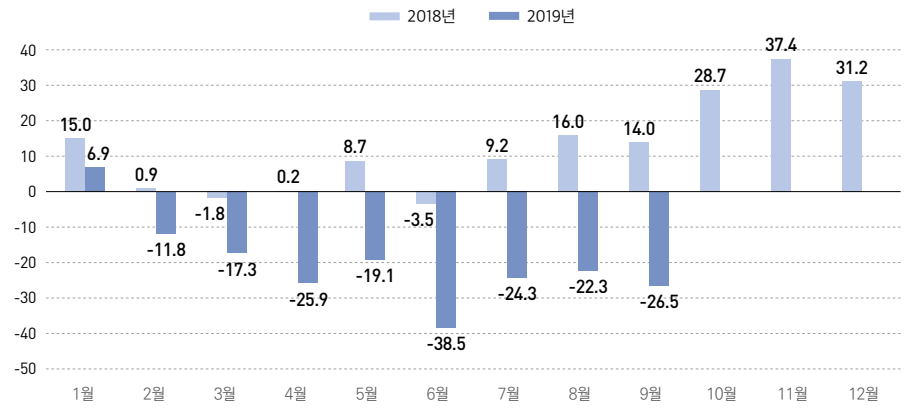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26.5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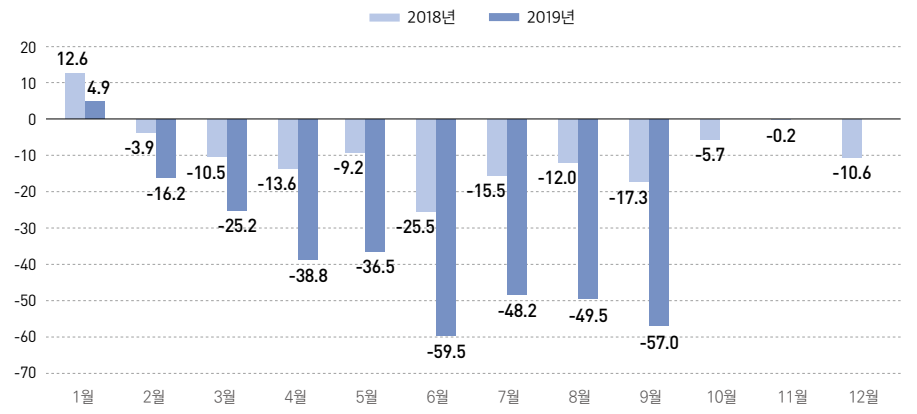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관리재정수지

57.0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2019년 추경예산 상 중앙정부 채무⁵는 701.9조 원이며, 9월 말 현재 694.4조 원이다. 이는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른 잔액 감소(3.3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3.5조 원 감소하였으며, 전년 결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대비 42.6조 원 증가하였다.

⁵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2018년 기준 국가채무는 680.5조 원으로 지방정부 채무 32.7조 원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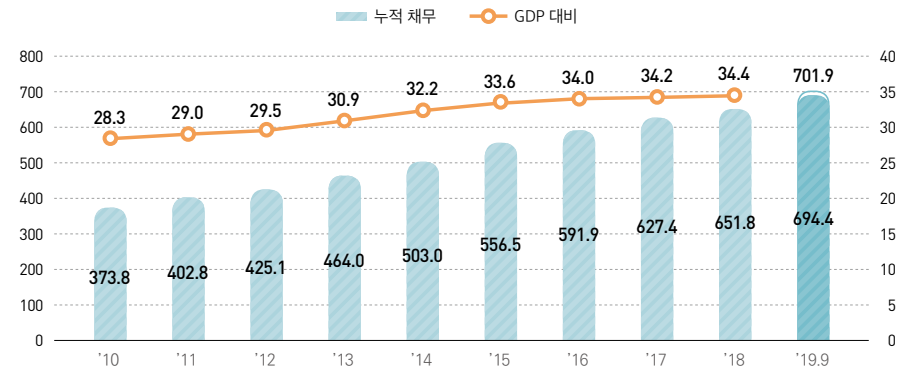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694.4조 원

중앙정부 채무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



주 1) 2019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규모를 나타냄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 → 2015년 기준년 개편, '19.6.4.)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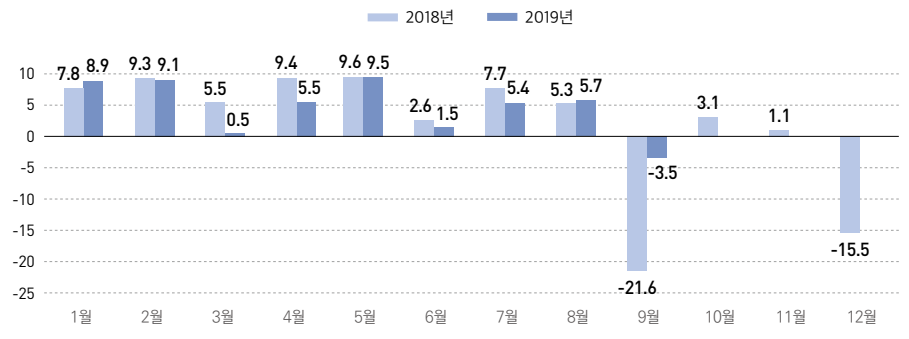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data.go.kr)

순차입 전월 대비

-3.5조 원

중앙정부 채무 순차입 추이

(단위: 조 원)



주: 순차입이란 특정 기간 내에 국고채 발행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가 규모에서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감소 규모를 제외한 잔액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data.go.kr)

국유재산

2019년 9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91.3조 원으로 전월 대비 3.2조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⁶ 817.7조 원(전월 대비 3.6조 원 증가), 일반재산⁷ 273.6조 원(전월 대비 0.4조 원 감소)으로 구성된다.

⁶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⁷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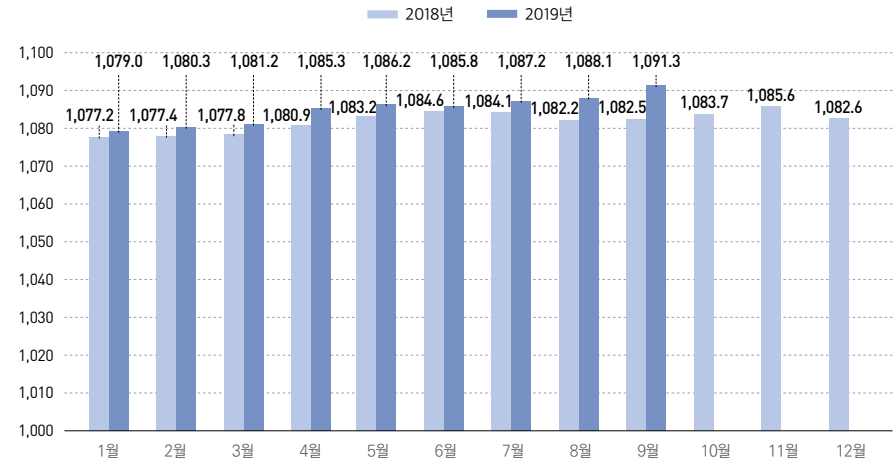


국유재산 현액

1,091.3조 원

국유재산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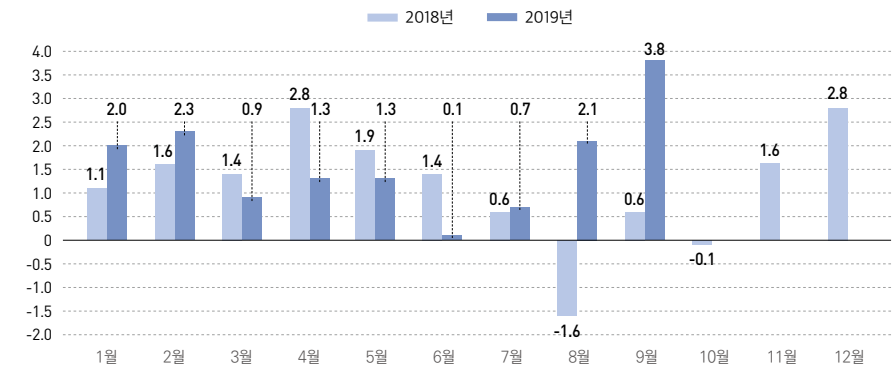
9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4조 717억 원이며 전월 대비 1조 6,623억 원 증가했다. 처분 총액은 3,174억 원으로 전월 대비 308억 원 증가하였으며, 9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3조 7,543억 원 초과한다.

국유재산 순취득 총액

3.8조 원

국유재산 순취득(취득·처분)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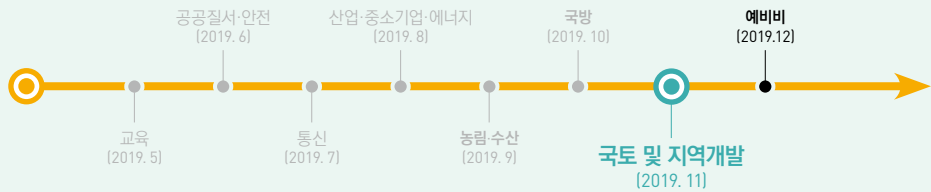
3) 순취득이란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에서 매각, 교환 및 환지, 멸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2. 분야별 통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이번 호에서는 16개 분야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구조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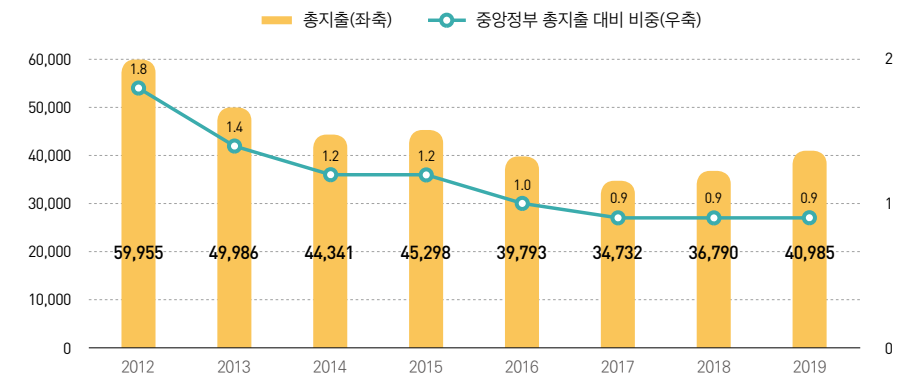
2019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총지출은 4조 985억 원(총지출 대비 0.9%)으로 2018년 (3조 6,790억 원) 대비 4,195억 원(11.4%) 증가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 조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추이

(단위: 억 원, %)



주: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 1조 8,335억 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 대비 44.7%), 특별회계 2조 2,650억 원(55.3%)로 편성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까지 총 5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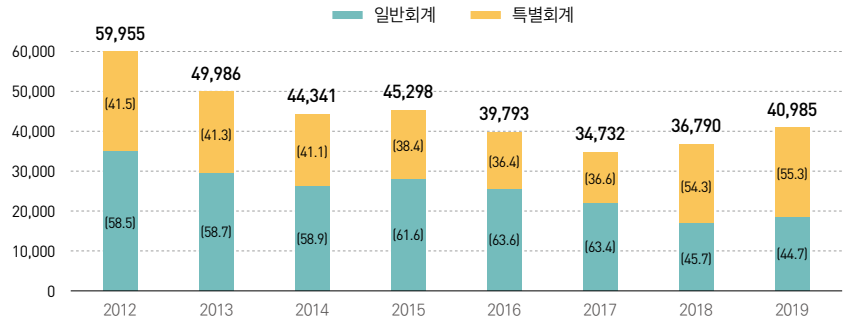
1.8조 원

특별회계

2.3조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조 9,112억 원, 특별회계 합계 대비 84.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2,985억 원, 13.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370억 원, 1.6%), 교통시설특별회계(100억 원, 0.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83억 원, 0.4%)로 편성되어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조 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0.3조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0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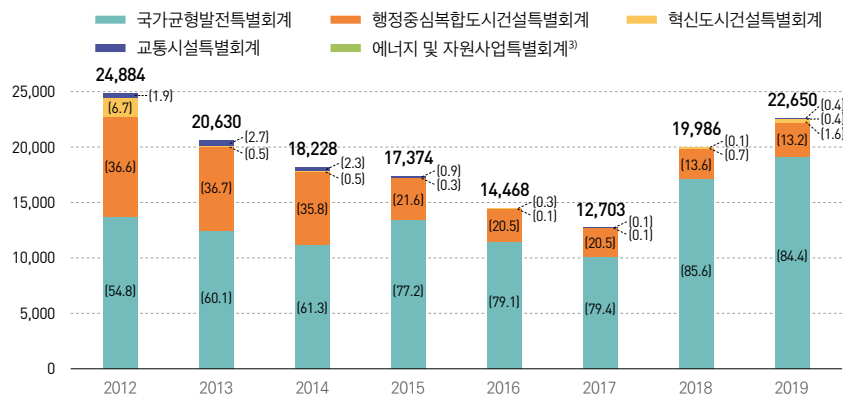
100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8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3) 2019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83억 원은 2018년까지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편성된 그린홈 사업이

2019년부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2004년 설치되었다. 주요수입은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타 회계 및 제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관련 사업,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 사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출연 및 보조 또는 용자 등으로 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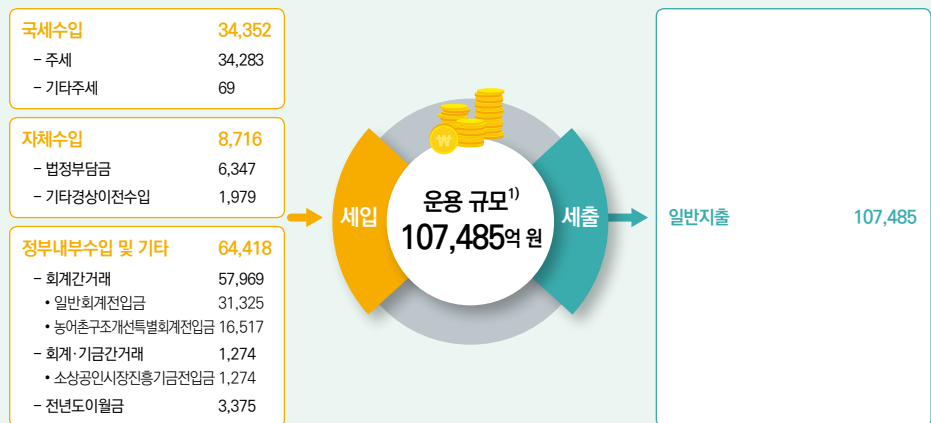
2019년 운용규모는 10조 7,485억 원으로 수입은 국세수입 3조 4,352억 원, 자체수입 8,716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6조 4,418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일반지출 10조 7,485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규모

10.7 조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일반지출 10.7조 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조 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수자원, 산업단지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49.3%(2조 205억 원)를 차지하고, 수자원 부문은 42.2%(1조 7,311억 원), 산업단지 부문 8.5%(3,469억 원)로 편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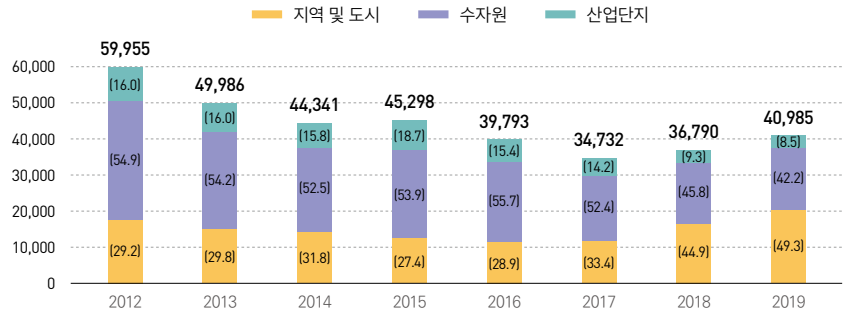
지역 및 도시
2.0조 원

수자원
1.7조 원

산업단지
0.3조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2)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 주요사업은 지방하천정비, 도시재생 사업, 남북도로 1단계 건설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 사업이 편성되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
0.6조 원

지방하천정비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542억 원)은 전국의 지방하천을 치수, 이수, 환경,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함으로써 홍수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
0.5조 원

도시재생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784억 원)은 인구 및 사업체 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 공간 혁신을 통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남북도로 1단계 건설 사업
913억 원

남북도로 1단계 건설 사업(일반회계, 913억 원)은 새만금 십(十)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으로 산업연구, 국제협력, 농생명, 관광레저용지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 사업
300억 원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 원)은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지역사업의 부처별 간막이식 기획, 단년도, 일회성 위주의 지원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최적화된 지역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중앙부처는 다년도에 걸쳐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 달의 이슈 키워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감염’, ‘확산방지’, ‘살처분’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출혈열의 특징을 갖는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이다. 특히, 급성형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¹⁾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인 접촉 외에도, 야생멧돼지 또는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를 통하거나 전염되었으나 열처리하지 않은 돼지고기로 만든 잔반을 먹은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나,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주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2007년 동유럽 국가의 한 항구의 선박에서 나온 잔반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이래 아시아로도 퍼지고 있어, 2018년 8월에는 중국, 몽골 등 아시아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의 발령 및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지역(관리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살처분하여 추가확산도 방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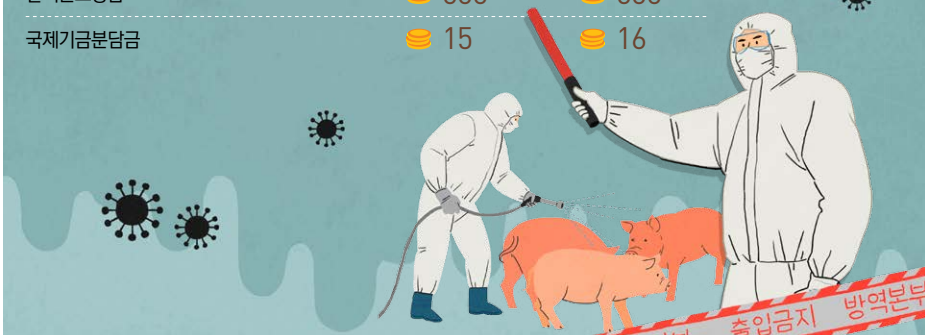
1. 1924년에 창설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2003년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démiologies에서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약자는 그대로 OIE를 사용하고 있다.

2019년도 가축 검역 및 방역 관련 주요사업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축 검역²·방역³시스템으로 전염성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 검역 및 방역 관련 주요사업 (단위: 억 원)

주요사업	2019년	2020년
검역본부정보화	92	109
동축산물검역검사	97	104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보조, 융자)	130	349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225	316
가축방역	181	220
시도가축방역	1,309	890
가축위생방역지원	516	580
살처분보상금	600	600
국제기금분담금	15	16



주: 총지출 기준(2019년은 최종예산, 2020년은 정부예산안)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동물 질병 및 가축 검역·방역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검역본부정보화 사업, 92억 원).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his.go.kr)이란 축산농장 및 시설, 차량 출입정보 등 방역 기초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방 활동부터 예찰, 진단, 통제,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검역·방역 업무의 효율성은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제공은 강화하고 있다.

² 검역이란 동식물 및 이를 가공한 식품을 매체로 전파될 수 있는 동식물 전염병 및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예방하고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실시하는 위생 조치를 말한다.

³ 방역이란 감염병의 유행을 막고 그 침입을 예방하는 실무와 대책까지 포함한 용어로 외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검역도 방역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를 수행하며 외국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있다(동축산물검역검사 사업, 2019년 최종예산 기준 97억 원). 노후 검역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와 함께 국가별 질병 발생상황의 수집·분석, 수입 동·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등의 철저한 검역 검사로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 보호 및 수입 동·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검역과 함께 가축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소요 물품·장비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시설의 신축·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 지원하거나(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사업, 130억 원), 국가 재난형 동물 질병의 방역기술 및 의약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225억 원), 고품질의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긴급방역에 드는 백신 및 진단 약품의 구입과 방역 인력의 현장 출동 및 정밀검사도 수행하고 있으며(가축방역 사업, 181억 원), 소독·방역 차량을 구입하거나 공중방역 수의사의 직무교육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시도가축방역 사업, 1,309억 원).

더불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된 물건을 살처분(폐기)한 축산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살처분보상금 사업, 600억 원). 본 사업을 통해 전염성 질병의 신고 의무를 심어줄 뿐만이 아니라 질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인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격리·역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해서도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양축농가의 소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9월 23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자율 방역의식을

을 확산하고 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 방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도 확립하고 있다(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516억 원). 국제적으로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식품품종보호 등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식품신품종보호연맹(UPOV) 등에 가입하고 있다(국제기구분담금 15억 원).



2019 한눈에 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재정 현황

Government at a Glance Southeast Asia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의 공공부문 혁신과 증거기반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해 2019 한눈에 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재정 현황 보고서를 올해 9월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우상희 재정분석기획부 연구원(woosh@kpfis.or.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9 한눈에 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재정 현황」(Government at a Glance Southeast Asia 2019) 보고서를 9월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동남아시아 10개국 국가는 2017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경제권을 함께 구성하며 평균 5.3%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 25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정책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공부문 혁신을 가이드하고,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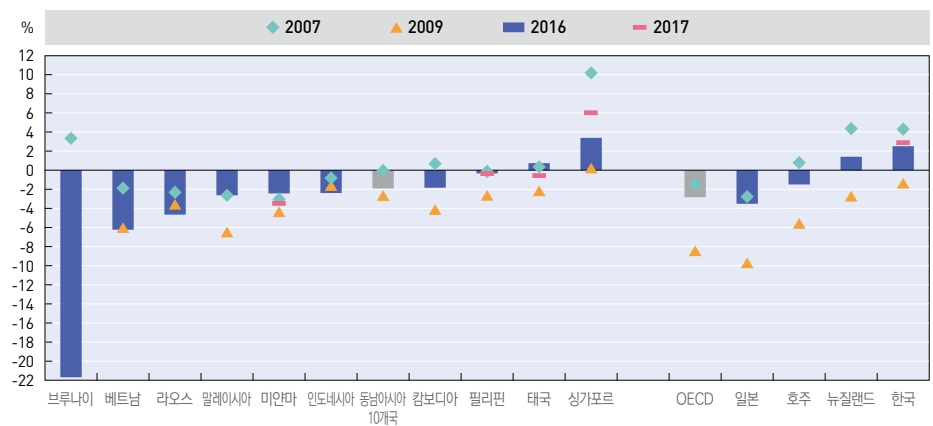
공공재정과 경제(Public Finance and Economics)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의 공공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국가 간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난다. 2009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평균 재정적자(Fiscal Deficit)는 GDP 대비 2.73%에 달하였다. 이는 2016년에 1.79%로 낮아졌지만, 2007년 0.19%에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OECD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2.8%인데 반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1.79%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역수지 호조, 높은 수준의 투자, 탄력적인 내수 회복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016년 국가별 재정수지(Fiscal Balance)를 비교하면, 브루나이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1.5%부터 싱가포르의 GDP 대비 3.3%의 재정흑자까지 분포되어 있다. 두 국가는 세계 경제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브루나이 경우, 에너지(석유 및 가스)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재정적자를 냈으며, 싱가포르는 제조업 및 무역 관련 서비스의 증가로 재정흑자를 나타낸다. 또한, 정부 부채(Government Debt)도 107%(싱가포르)부터 0.7%(브루나이)까지 분포되어 있을 만큼 국가별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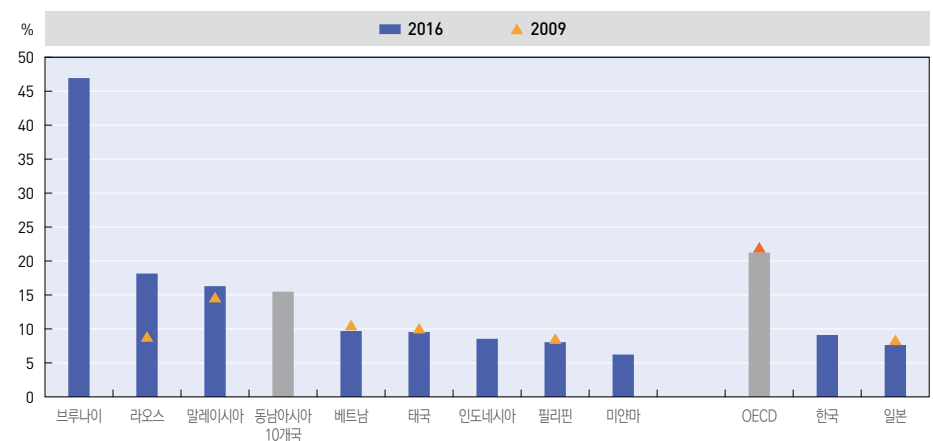
그림 1.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2007, 2009, 2016, 2017)



공공고용(Public Employment)

정부의 성과는 공공부문 노동력의 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의 공공부문 고용과 정부지출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총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률(2009, 2016)



2016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평균 공공부문 고용률은 총 고용률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다. 브루나이 경우, 공공부문의 고용률은 총 고용률 대비 47%에 달하며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얀마는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총 고용률 대비 6% 수준을 나타내어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OECD 회원국의 평균 공공부문 고용률은 총 고용률 대비 21%로 동남아시아 10개국의 평균보다 대략 7%p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한국(9%)과 일본(8%)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동남아시아 평균 공공부문 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6년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의 공공부문 여성고용률은 47%로 남녀성비 비율은 비슷해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OECD 회원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OECD 여성의 비율은 평균 28%인데 비해 동남아시아 10개국은 10%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 관행 및 절차(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재정제도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는 중기재정계획(MTEFs;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정부의 단년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로써, 일반적으로 현재 예산보다 3년 이상의 기간을 보여준다. 단년도 예산편성에 중기적인 관점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림 3. 중앙정부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중기관점(2018)

	중기재정계획 유무 및 법적 기반	주요 특성		지출 한도의 대상		
		지출한도의 기간 (다음 예산연도 포함)	지출변경 빈도	총 지출	프로그램 또는 분야 지출	조직 지출
브루나이	⊙	X	X	X	X	X
캄보디아	⊙	X	X	X	X	X
인도네시아	●	4년	1년에 한 번			✓
라오스	⊙	X	X	X	X	X
말레이시아	○	3년	1년에 한 번	✓		
미얀마	○	3년	1년에 한 번			✓
필리핀	○	6년 또는 그 이상	1년에 한 번	✓		
싱가포르	○	5년	5년마다			✓
태국	●	3년	1년에 한 번			✓
베트남	✓	3년	1년에 한 번	✓	✓	✓
오스트레일리아	✓	4년	1년에 한 번 이상			
일본	○	3년	수정되지 않음	✓	✓	
대한민국	●	5년	1년에 한 번	✓	✓	
뉴질랜드	✓	4년	1년에 한 번	✓		✓

● 예 : 중기재정계획의 존재와 지출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예 : 지출한도가 중기 추정치를 초과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예 : MTEF 또는 예산 한도가 전략/정책에 명시되어 있음

✓ 예

⊙ 아니오

X 해당 사항 없음(예 : 중기재정계획 없음)

OECD 회원국의 91%는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7개 국가는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중기재정계획 또는 지출한도에 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공공부문의 인력 채용, 보수, 근무조건 그리고 해고와 같은 인적자원관리 결정은 중앙 인적자원관리 당국에서 직접 하거나 각 부처, 부서, 혹은 기관에 위임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중앙집권화된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2개국은 고위공무원 채용 시 외부선발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내부에서 고위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과 열린 정부(Digital and Open Government) & 국민 만족도(Citizen Satisfaction)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는 대부분 디지털 정부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공공서비스(허가, 라이선스, 인증서 등)로 제한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 전략의 범위를 다른 공공 분야에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3개국은 정부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의 편익을 측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재정 편익을 측정하지 않는다. 또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3개 국가는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시민이 공공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FOI; Freedom of Information) 법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의 국민은 교육시스템, 학교, 헬스케어, 사법시스템 등에 대해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시스템 및 학교에 대해서 83%의 국민이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68%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든든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강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2020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다양한 분야의 특색 사업 77선을 발표했다. 이중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 중의 하나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의 14.8%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수는 438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를 차지하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준미 사무관을 만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담당.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글. 정재림 사진. 정우철

복합적인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고령화를 준비하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는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6가지의 노인돌봄 재정사업¹을 진행해왔다.

“6가지 서비스 중 규모가 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후원단체로 연계하는 것인데 올해 29.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노인돌봄 재정사업의 6가지 서비스는

-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③ 단기사서서비스
- ④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
- 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 ⑥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이다.

Interview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준미

사무관

이준미 사무관은 노인정책과 기획 총괄을 맡아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해왔다.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이 닿지 못하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업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입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분 중에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장기요양서비스와 달리 서비스 필요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시간을 제공하며 올해 4.8만 명 정도가 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단기가사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과 상관없이 만 65세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의 부부가구가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단기간 가사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을 연계받기 어려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은 은둔형이나 우울형 독거노인에 대해 개별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115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

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막 독거노인에 진입한 노인을 대상으로 혼자 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돌봄 서비스들이 가족 안에서 이뤄져 왔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독거노인, 고령노인, 치매노인의 증가로 최근 10년간 기혼 자식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있다. 사회관계망 속에서 자식이나 친구, 친인척과 연락을 하는 경우

도 적어,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이 변화되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인돌봄을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노인돌봄 재정사업의 분절적인 6개 사업을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한다.

“6개로 나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복지사업의 경우 유사 중복제공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지원을 받으면 다른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6개의 사업은 개별적으로 다른 욕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건강한 고령화, 웰니스²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이나 노인돌봄기본처럼 큰 사업에 비해 나머지 사업은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었기에 현장에서부터 사업들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2.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웰니스를 이끈다

6개 각각의 사업은 통합한다는 것은 각각 다른 욕구와 솔루션을 통합하는 것이기에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개편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장기요양 등급 A, B라는 자격과 중위 소득 160%의 객관적인 조건이 있으면 돌봄종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서비스는 여러 돌봄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인 단절, 신체적 기능상태, 정신적인 인지저하상태, 우울감 등을 대면으로 조사하고 서비스의 자격 유무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원받아야 하는지 개인별로 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획일적인 서비스를 자격에 따라 주는 게 아닌 개개인별로 접근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평가받는 것 외에 지원 서비스 간의 균형도 중요하다. “하나의 취약요인은 다른 취약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 가지를 잘 지원한다고 해도 다른 취약요인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의 상태가 취약해지고 일상적인 삶이 무너져 시설이나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통합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삶에 안정이 생기면 고비용 돌봄으로 진입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살아계시는 동안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실수요자인 노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편이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살아계시는 동안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기에 어려운 요소들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내년부터 6개로 개별운영되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개편사업을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유연하고 대응성 높게 지원하기 위한 인력충원도 필요 요소입니다. 상담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 규모도 2천 명으로 진행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수행기관에서 직접 생활지원사 2.8만 명을 채용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배치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큰 과업이 될 것입니다. 또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도구, 서비스 매뉴얼 등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연구·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준미 사무관은 단기적 목표는 개편사업을 잘 안착시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취약 요인을 갖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체감 가능한 복지 서비스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용자를 얻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에는 한 해의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3년, 5년의 지출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에 초점을 맞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는 달리 5년 단위의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연도별·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써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 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포함사항 및 첨부서류(「국가재정법」 제7조 2항) ◆

포함사항

- 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②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 ③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 ④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
- ⑤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⑥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⑦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 ⑧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⑨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첨부서류

- ①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 ③ 국가채무관리계획
- ④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그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¹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매년 2월부터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해 논의하게 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중기재정운용전략, 차년도 예산안편성방향, 각 분야별 재원투자방향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은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9% 증가,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6.5%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연평균 3% 중반 수준의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생활SOC 확충 등 국민생활 밀착형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전년도 12월 31일까지)
-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구성·운영(매년 2월~)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의견수렴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매년 9월 3일까지)

1 지침은

- ① 향후 재정운용여건 및 방향
 - ②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③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연계
 - ④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기금 편성일정
 - ⑤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에드워드 워드, 「남해 거품, 1720년 '체인지 앨리'의 풍경」, 1847년.

18세기 쌍둥이 금융거품, 세계경제를 뒤흔들다

글. 송병건 성균관대학교 교수(bks21@skku.edu)

들뜬 표정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탁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들 새로운 정보를 찾아듣고 서로 수군대며 논의하느라 바쁘다. 에드워드 워드(Edward Ward)가 제작한 「남해 거품, 1720년 '체인지 앨리'의 풍경」★은 1720년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금융거품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다. 투기 열풍이 한창 뜨거울 때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주식을 사기 위해, 또는 남해회사 주식의 전망에 대한 풍문을 듣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를 보여준다. 일반 대중이 모두 주식

**‘교환골목
(체인지 엘리)
라고 작명한
이 거리는 지금은
장밋빛 흥분으로
가득 차있지만
곧 분노 서린
울분의 거리가
될 운명이었다.**

에 관심을 쏟게 되는 시점이 곧 ‘상투’라는 점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화가가 흥미롭게 ‘교환골목(체인지 엘리)’라고 작명한 이 거리는 지금은 장밋빛 흥분으로 가득 차있지만 곧 분노 서린 울분의 거리가 될 운명이었다.

여러 나라의 금융시장을 동시에 뒤흔드는 국제적 공황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경제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세기 후반부터였다. 그렇지만 국제적 금융공황의 원조는 그보다 훨씬 일찍 존재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근대적 금융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한 중상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637년 네덜란드에서 튜립공황이 발생했지만, 이 거품붕괴의 영향은 네덜란드 국내에 한정됐고 경제에 미친 충격도 제한적이었다. 보다 본격적인 국제적 금융공황은 1720년에 발생했다. 중상주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거의 동시에 거품이 터졌다.

먼저 영국의 사례를 보자. 사건의 중심에는 남해회사가 있었다. 18세기 초 국채 증가로 신음하던 영국 정부는 수익성이 높은 무역독점권을 특정 기업에게 부여하고 대신에 그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국채 소유자들에게 내주는 방안을 기획했다. 정부는 재정 안정을 얻을 것이고, 채권자들은 국채 대신 기업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고, 기업은 독점적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묘한 해법으로 보였다. 오늘날로 보자면 재정개혁이 필요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이었다. 여기서 특정기업이 남해회사고, 무역독점권은 스페인령 중남미로의 노예 무역에 대한 권리였다.

1711년 주식회사 형태로 남해회사가 설립되었고, 1720년 국채의 주식전환이 곧 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와 왕실 인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1720년 초 128파운드였던 주가는 7월에 900파운드를 넘어섰다. 주식으로 횡재를 한 사람들에게 대한 뉴스가 퍼져나갔고 주가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 보였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앞다퉈 주식을 사들였다.

그렇지만 투기와열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었다. 부풀어진 가치가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순간이다. 8월부터 주가가 폭락해 이듬해 초에는 원래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열의 꼬트머리에서 ‘상투를 쥔’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동시대 최고의 석학 아이작 뉴턴(Issac Newton)도 큰 손실을 입었다. 그는 초반에 매입한 주식을 상승장에서 두 배의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보았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자 마음이 흔들려 다시 거액을 투자했다가 매각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구입가의 절반 가격에서 팔아치워야 했다. 최고의 과학자이자 1699년 조폐국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1703년 왕립협회(Royal Society)의 회장에 올랐으며 1705년에 기사 칭호를 받은 인물이 주식투자로 거액을 잃었다는 뉴스는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합리적·과학적 사고의 대명사이자 상류사회의 중심인물로서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위치에 있었던 뉴턴이 큰 손실을 보다니! ‘불규칙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대중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뉴턴이 한탄했다는 출처불명의 이야기가 이후 널리 퍼졌다.



1637년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튜립공황이 최초의 근대적 금융공황이었다면, 1720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쌍둥이 금융공황은 거품의 생성과 붕괴가 단발성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 남해회사 거품을 풍자한 카드, 17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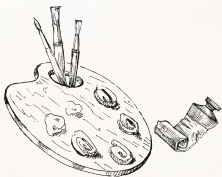
왼쪽 그림은 남해회사 거품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당시의 카드★★다. 자그만 섬에 커다란 나무가 있다. 나무에 올라탄 사람들 중 일부는 바닷물로 뛰어 들고 있고, 일부는 나뭇가지에 힘겹게 매달려 있으며, 일부는 모래밭에서 바닥이 얇은 물속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 넣고 있다. '무모한 바보들은 남해에 몸을 던져 익사하게 되니 조심해서 깊은 물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주식광풍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다.

같은 해에 프랑스에서는 더 큰 규모로 금융공황이 발생했다. 여기에서는 미시시피회사(Mississippi Company)가 중심에 있었다. 주인공은 존 로(John Law)★★★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금융가였다. 로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불법적 결투로 사형을 언도받은 후 탈옥해 암스테르담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영민한 두뇌로 세계적 경제중심도시에서 벌어지는 금융변화를 분석하여 현실 경제에 대한 감을 키웠다. 로는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프랑스를 자신의 경제실험장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루이 15세의 섭정인 오를레앙 공 필리프 2세에게 접근하여 프랑스 경제를 재건할 야심찬 계획을 펼쳤다. 우선 미시시피회사를 통해 북아메리카의 광활한 프랑스령 루이지애나 지역에 대한 무역독점권을 획득한다. 프랑스가 지배권을 보유한 이 지역은 로의 계획에 따르면 미시시피회사에게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안겨줄 보물이었다.

다음 단계로 미시시피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한다. 이어서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가진 은행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통화 공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로는



☆☆☆ 존 로의 초상.



* 이 글은 『비주얼 경제사』(2015)와 『세계화의 풍경들』(2017)에 실린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무역독점권과 주식회사가 연결된 영국 모델에다 발권은행을 덧붙인 경제체제를 확립했다. 이제 프랑스에서는 주가를 높이 유지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릴 수도 있게 됐다. 그만큼 거품의 규모가 커졌고, 거품이 꺼질 때에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실도 커졌다. 실제로 1년 사이에 미시시피회사의 시가총액은 무려 97%나 폭락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금융천재'였던 로의 역사적 실험은 이렇게 비참한 파국을 맞았다. 결국 로는 해임되어 프랑스에서 추방당했고, 그 후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도박을 하면서 힘든 여생을 보냈다.

오늘날 일부 경제사학자들은 금융공황을 비이성적 충동의 결과라고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거품의 존재를 알면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올라타고' 다시 적절한 시점에 '뛰어내려' 이익을 얻은 '합리적'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무슨 위안이 될까? 그저 2차적 고통을 더해줄 뿐이다.

1637년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튜립공황이 최초의 근대적 금융공황이었다면, 1720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쌍둥이 금융공황은 거품의 생성과 붕괴가 단발성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실제로 금융공황은 1720년 이후 오늘날까지 점점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때마다 각국의 정부는 금융공황의 뒤흔들거리를 위해 재정 악화를 감수해야만 했다. 과연 인류에게 금융거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일까? 아직까지 우리는 금융공황의 역사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군함 정도는 알아서 만들어라

글. 이성주 『엽기조선왕조실록』 저자, 문화 칼럼니스트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국가예산도 적었고, 월급을 받는 관료의 숫자도 적었다. 문관 관료 숫자만 보면, 500명 정도 수준이었다(어디까지나 월급을 받는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작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이 500명의 인건비도 상황에 따라 줄어드는 구조였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세수가 부족한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 '만만한'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나라의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국가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나 비품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하는 대목이다. 인건비의 경우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장비나 비품은 돈을 지불해야지만 구할 수 있지 않은가? 관청에서 사용하는 소소한 사무비품이나 행정비품의 경우에는 어찌어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해경이나 해군이 순찰이나 전투에 사용하는 군함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냈을까? 당시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자.





조선시대 **지방에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지방에서 해결**했다.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다.

“(상략)…인하여 연해의 백성들과 물건을 교역(交易)하는 등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습관이 더욱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포(追捕)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다 썼지만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에 있어 최상의 계책은 비선(飛船)을 많이 만들어 밤낮으로 바다 위에 띄워 놓고 당선의 어채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먼저 비선 20척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만 본영(本營)의 재력으로는 실로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영의 유고전(留庫錢)과 병영의 별비전(別備錢) 각 2백 민(緡), 상정미(詳定米) 50곡(斛)을 특별히 획급해 주도록 허락하면 제 때에 배를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그 말을 따를 것을 청하니, 임금 이 말하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은 간과(干戈)가 극렬한 가운데에서도 능히 전선(戰艦)을 만들었는데 웅진(鎗津)이 아무리 피해를 당하고 해도 돈 4백 냥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런 청을 한단 말인가? 수신(帥臣)은 추고하고 스스로 마련하여 배를 만들게 하라.”

하였다. 형조 참판 이주진(李周鎭)이 말하기를,

“황해 수사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만 1년에 거두어들이는 어리(漁利)가 4, 5천 냥에 가까워서 그 재력이 호곤(湖閫)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하략)

“황해 수사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만 1년에 거두어들이는 어리(漁利)가 4, 5천 냥에 가까워서 그 재력이 호곤(湖閫)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하략)

- 조선왕조실록 영조 20년(1744년) 2월 27일의 기록 중 발췌

박문수 하면, 암행어사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때는 황해 수사로 바다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임지에 부임한 직후 살펴보니, 나라에서 금한 밀무역이 성행하는 걸 확인했다. 이를 막을 방도를 백방으로 알아보다 내놓은 결론이,

“경비함 20척을 만들어서 집중 단속을 하면 될 거 같다.”

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배를 찍어낼 예산이 없었다는 것이다(지금 기준으로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박문수는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400냥 정도만 내려 보내주면, 경비함 20척을 만들어서 밀수를 막아보겠다.”

이 말에 영조는 불쾌했던 것 같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알아서 전함을 건조하고, 대포를 만들고, 화약을 만들었다. 그 와중에 정부에 세금도 보냈는데, 넌 그것도 못 하나? 네가 이순신 장군보다 더 힘드냐?” 라고 타박을 한 것이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서 농사를 지어 군량미를 충당했

고, 나무를 잘라 판옥선과 거북선을 건조했으며, 틈틈이 중앙정부에 세금도 보냈다. 전쟁 당시 이순신이 중앙정부에 요청했던 건 화약을 만들기 위해 유황을 요청한 것과(유황을 만들 수는 없었으므로) 전염병이 돌아 의사가 필요할 때 의원을 보내달란 게 고작이었다.

영조의 말을 곱씹어 보면,

“박문수란 녀석이 나름 유능한 놈인 줄 알았는데, 겨우 이런 일로 지원 요청을 해? 실망인데?”

라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영조의 심기를 살피던 형조 참판 이주진이 슬쩍 박문수를 변호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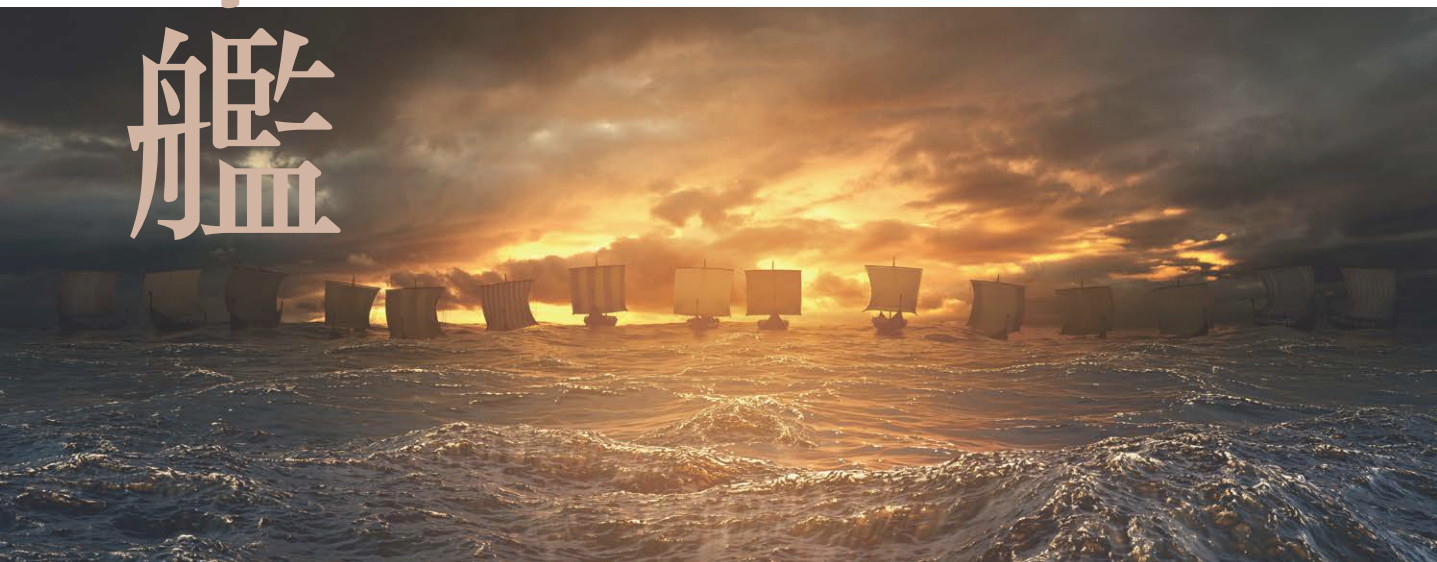
“박문수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아직 업무 파악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그쪽 함대가 시간 날 때마다 고기잡이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4~5천 냥은 되는데, 그것을 가져다 쓰면 될 건데…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니 잘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 지방에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지방에서 해결했다.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애잔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조선은 적게 거두고, 적게 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던 나라였다. 또한, 당시 지방관청들은 자체 예산을 조달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도, 군함까지 알아서 만들라는 건 심한 게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선은 그게 가능하도록 수많은 예산확보 방법들을 생각해 냈고 이를 실천에 옮겼던 나라인 걸 기억해야 한다. 작은 정부이지만, 나름 있어야 할 건 다 있었던 게 조선이란 나라였다.

軍艦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저 자 김승석
출판사 북코리아
발간일 2019년 10월

경제학자의 묵자 읽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우기 이전.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 형성의 길을 찾아 중국 사상계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묵자는 이 시기에 등장한 사상가 중 한 명이다. 이 책은 그러한 묵자사상이 집성된 “묵자(墨子)”를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해설서이다. 고전을 읽는 이유는 인류의 정신적 스승인 그들의 저작을 통해 현실을 반성하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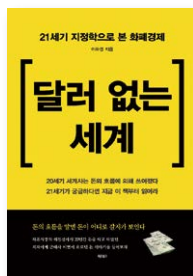


저 자 김영식
출판사 박영사
발간일 2019년 10월

경제학 공부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 가장 심오한 화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일반인과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현실경제를 이해하고 나름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원리를 중심으로 집필한 책이다. 경제학원론의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도 간결하고 용이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경제의 작동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각 장을 분리하여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읽어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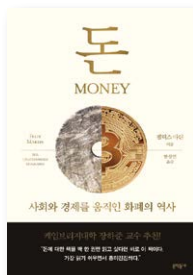


저 자 이하경
출판사 바른북스
발간일 2019년 10월

달려 없는 세계

21세기 지정학으로 본 화폐경제

기본적인 경제지식의 수준이 높아져 있는 시기에 스스로 경제를 읽어내는 자신만의 확고한 관점이 필요해졌다.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지표들의 이면에서 실제 그 지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돈 그 자체의 흐름에 대해 다룬다. 글로벌 유동성의 형성과 흐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화폐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주며, 저자의 자료 조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만들어낸 지금 세계의 모습을 굵직굵직한 지정학적 이벤트와 함께 보여준다.



저 자 펠릭스 마틴
울 김 한상연
출판사 문학동네
발간일 2019년 09월

돈

사회와 경제를 움직인 화폐의 역사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안다고 믿었던 돈의 역사를 기술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점점 이해 불가한 것이 되어가는 금융과 경제정책, 세계경제가 모색해야 할 길을 제시한다. 고대 역사와 사상, 중세와 근대의 화폐 정책 및 군주의 역할, 은행의 탄생, 로크의 사상이 화폐를 보는 관점에 끼친 영향은 물론 케인스, 월터 배젓, 래리 서머스 등 여러 경제학자의 시각을 두루 기술하며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돈을 바라보게끔 안내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보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일선관서 담당자 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10월 14일(월)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보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일선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부처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150명이 신규 보관금 분류유형 적용, 중앙관서 보관금 마감 등 개선된 dBrain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부처, 지자체 설명회



을 받았으며 향후 일선관서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 및 FAQ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나라도움운영본부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기능 오픈에 앞서 10월 17일(목), 18(금) 양일간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정부세종청사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설명회에는 보조사업담당자 약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란 부

한국재정정보원 시민참여형 경영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실시



정수급 사례들을 분석하여 DB를 유형별로 분류 및 표준화시켜놓는 기능으로, 앞으로 사업 담당자는 각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부정수급 정보 일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보조사업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사회적가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외부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고취사업 및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자 자문단을 발족했다. 전문단은 전·현직 비상임이사, 청년, 사회적가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장기 경영목표 및 사회적가치 세부과제,

기타 기관 홍보자료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게 된다. 10월 22일(화) 한국재정정보원 18층 대회의실에서 원장, 상임이사를 비롯한 시민참여형 경영자문단이 모여 1차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자문단 운영계획 및 기관사업 소개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정보원은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열린 경영을 실천해나갈 예정이다.



**e나라도움운영본부
'2019년 베스트 고객센터'
선정**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운영본부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가 '한국콜센터산업협회 2019년 베스트 고객센터'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e나라도움 고객센터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보조금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ARS 접근성 개선, 상담지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집중기 비상대응체계 마련, 성과평가제도 정비, 체계적인 교육 등 위탁사업자와 전략적인 협조를 통해 상담품질을 개선해왔다. 아울러 e나라도움 고객응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권리보호를 위해 위탁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상생협력 중이며, 국고보조금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원장,
범농협 노블 사회공헌봉사단
사회공헌위원 위촉**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10월 30일(수), 농협 본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범농협 노블 사회공헌봉사단(이하 농협 봉사단)'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농협 봉사단은 농협 고객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소회계층 배려와 봉사를 통해 사회적 통합 및 노

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한 사회 공헌 플랫폼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농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이며,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김재훈 원장이 직접 사회공헌위원으로 나섰다. 김재훈 원장은 이날 오전 발대식에 참석한 뒤, 위원들과 함께 남대문 쪽방촌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를 증정하였다. 김재훈 원장은 앞으로 사회공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역량을 농협 봉사단과 연계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애 독 자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Z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을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문 제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등과 같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의
지출을 일컫는 용어는?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19. 11. 27. ~ 2019. 12. 13.

POSTCARD



10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
자동안전화장치

☆ 상품 당첨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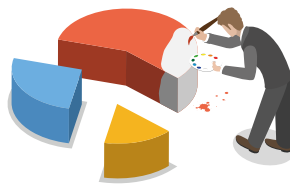
woo*****@yahoo.co.kr
cho*****@daum.net
wcr****@hanmail.net
jby****@nate.com
jhk*****@gmail.com
lee*****@naver.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쿠폰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0월 호의 청년을 위한 행복한 주택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이야기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느 분야와 어떤 계층이 되었던 값지게 쓰이지
않는 게 없겠지만, 국가비전수립과 발전전략이란 측면에서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란 희망 메시지 잘 전달해준
기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jby****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